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5시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지원 • 본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차별금지법 긴급토론회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해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고민을 나눕니다.

토론회 진행

사회	14:00~14:10	• 사회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인사	14:10~14:20	• 이해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	14:20~15:20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들이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	15:20~16:10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종합토론	16:10~16:5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마무리	16:50~17:00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낭독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들이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헌법이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 금지 사유의 예시로서 명시한 것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¹⁾, 「여성발전기본법」²⁾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성별이라는 단일 사유로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차별금지 및 평등 법제가 만들어지고 성차별의 시정과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구축되어왔다. 그럼에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페미니즘의 만남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페미니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2020년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안(이하 ‘인권위안’)³⁾, 장혜영의원안⁴⁾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페미니즘에서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지금 한국사회에서 ‘평등’이 직면한 현실

그간 평등과 차별금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 차별금지법률들, 차별시정기구, 평등 정책 추진 기구, 인권과 평등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각계에서 차별,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교육이 의무화 또는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차별 의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 평등과 차별금지가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충분히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는 수많은 백래시를 목격해왔다. 무엇보다도 성적지향 차별을 중심으로, ‘차별할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이 차별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2007년 법무부는 ‘사회적 논란’을 내세우면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등 차별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은 줄줄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3년에는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 중 2건이 발의 두 달 만에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인권헌장, 인권조례들이 역시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좌절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감추어져 있던 혐오와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인권운동의 연대가 확대, 강화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러섬의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공공연하게 ‘평등 반대’를 표방하는 혐오세력들의 발언권은 커졌고, 국

1) 2005년 폐지

2)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3)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4)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일 2020.6.29., 의안번호 2101116

회, 정부, 연구기관 등등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은 위축되어 양쪽 모두에게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혐오세력에 대항하여 평등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평등의 가치가 주류 담론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배제 전략을 선호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연설 도중의 ‘나중에’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평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주었다.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나중’은 아직 오지 않았다. 차별과 혐오는 ‘갈등’, ‘논쟁’으로 해석되고, 차별 하려는 자와 차별을 당하는 자의 권력 불균형과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소거되었다. ‘논란’에서 ‘안전한’ 언어와 주제를 찾는 동안 차별은 방치되었다. 국가는 ‘논란이 적은’ 차별만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차별은 허용하기를 선택했다. 그 결과 혐오의 언어는 확산되고 ‘안전한’ 주제조차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 혐오는 보수주의적 종교집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남초 커뮤니티로부터 확산되는 광범위한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평등 개념을 차츰치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전달하는 언론과 수용적인 정치권, 국가의 도움으로 정상화되고 기업과 정부를, 국회를, 심지어는 연구기관조차 뒤로 물러나 침묵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조차도 ‘안전하지 못한’ 주제가 되어 간다. 또한 혐오는 페미니즘의 이름으로도 왔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와 안전 확보를 주장하면서 트랜스젠더와 난민을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현실에도 우리는 직면해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구축되는 동안에도, 대체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이며 평등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혐오의 확산은 평등의 요구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각자에게 내재된 혐오와 평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입장,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가 제한되어도 무방하다는 태도, 평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 평등 개념을 형식적, 기계적 평등 이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인식은,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혐오에 대한 두려움을 방패삼아,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여 표면화되고 있다. 성차별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기본법, 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영역으로,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차별의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평등 실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차별의 해소는 모든 차별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2. 차별의 교차성과 복합차별

두 개 이상의 차별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차별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는 ‘이중차별’, ‘삼중차별’과 같이 ‘중복차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여성은 장애차별과 성차별의 이중차별에 직면한다’는 설명이다.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하면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때 비교 대상은 비장애여성 또는 장애남성으로, 비장애여성이 경험하지 않는 장애여성의 차별 경험은 장애차별, 장애남성이 경험하지 않는 장애여성의 차별 경험은 성차별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여성’의 경험, ‘장애인’의 경험과 같이 집단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경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다른 정체성과 구분되는, 단일하고 본질적인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억압받다고 본다

(Harris, 1990; Spelman, 1988).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장애, 연령 등등과 같은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다수이고, 다수의 정체성들은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삶의 조건을 만들고, 다층적 경험을 하게 한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항상 더 본질적이라거나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체성들 간의 위계가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정체성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은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으로 설명가능하며(Crenshaw, 1991), 차별을 설명할 때 ‘교차차별’, ‘복합차별’ 등으로 표현된다. 장애여성의 경험에 교차성 분석을 적용하면, 장애여성은 단지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 장애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장애 정체성의 영향을 받고,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젠더 정체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장애여성은 장애인성도, 비장애여성도 하지 않는 경험을 한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 역할이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가족 내에서 임신, 출산, 양육하여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에 대하여 페미니즘은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고, 성적 존재가 아닌 역할로 평가 받아야 하며, 어머니 역할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설명에서 ‘여성’은 실은 비장애여성을 의미한다. 장애여성은 종종 성적 존재로 인정되지도 않고 재생산을 강요당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장애여성의 재생산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된다.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보편적 여성’으로서 비장애여성의 경험과 필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여성의 경험조차 단일하지 않다. ‘장애여성’조차 장애의 종류, 장애 정도 등등에 따른 차이를 지워버리는 범주다.

물론 본질주의는 차별을 설명하고 변화의 전략을 구성하는 시작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경험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단적 경험으로 의미화하며 개인적인 것의 정치적인 측면을 깨닫는 의식교양 방법은,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존재를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집단 내 동질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차이는 다시 개별화된다. 차별받는 집단이 동질적인 경험을 한다고 간주하면, 실제로는 차별받는 집단 중에서도 좀 더 중심에 있는 주체의 경험이 집단의 경험을 대표하게 되고, 내부의 차이는 침묵되거나 보류될 것이 강요된다. 소수자 집단에서조차 ‘나중에’는 존재한다.

더구나 차별과 억압의 지배체계는 각기 독자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정체성들마다 작동하는 지배체계는 상호 연동하면서 서로를 지탱한다(Razack, 1994). 남성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는 관념 아래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으로 명명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적 행동’은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의미하고 강요하면서 여성을 ‘취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왔다(Garland-Thomson, 2002; Young, 1980). 여성에 대한 비하가 여성을 장애인과 동일시하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가 게이를 여성화하는 표현을 수반할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비하, 동성애자와 여성에 대한 비하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에 대항하여 정상성의 범주, 남성이라는 범주에 속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성평등, 성적지향 평등에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장애차별과 성차별에 기여하게 된다. 정상과 비정상, 우등과 열등의 이분법은 그대로 유지되며, 비정상과 열등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성차별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는 성차별 외의 여러 차별이 서로 연동되면서 작동하는 방식에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차별의 교차성을 감안하면, 단일한 사유에 제한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만으로는 실제 차별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데도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각기 구분된 차별 사유만을 규제하는 법률 하에서는 오직 그 사유가 차별의 이유일 때라야 차별 경험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의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 차별시정기구, 정책 단위는 오직 그 사유만이 차별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단일 정체성을 기준으로 쪼개진 차별금지법 체계에서, 장애여성, 고령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떤 법을 통해 호소할 수 있을까. 아마도 본인의 차별 경험을 더 잘 설명해주는 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이 선택될 것이다. 차별 구제의 절차로 들어가면, 금지되는 차별 사유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만 차별행위가 인정되고 시정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지되는 차별 사유와 영역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유에 해당할 때 차별시정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가 중요해진다. 입증 절차에서는 필연적으로 입증에 필요한 사실만이 더욱 부각되고, 재구성되어, 살아남는다.

어떤 20대 레즈비언 여성이 조직 내에서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미세한 차별들과 성별표현에 대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당사자들의 연령과 성별, 성별표현, 성적지향, 계급, 조직 구성, 조직 문화 등등의 요소들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피해 구제’의 맥락에서 그 경험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성희롱’으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차별과 관련된 관행과 제도의 축적 결과, 이 사례에서 현재의 법령과 취업규칙 등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행위는 성희롱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성희롱 피해자’로 접근될 것이며, 상대방의 다양한 차별 행위들 중에서 성적 접근에만 방점이 찍히게 된다. 피해 구제 절차에서는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같은 성희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을 차지한다. 피해자는 이성애적 방식으로 제한된 ‘성희롱’에 대해서만 진술하도록 요청받기 쉽다. 성차별적인 표현과 처우, 상대방이 ‘나이 어린 여성’이어서 가능한 비하, 성적 정체성 또는 성별표현과 관련된 혐오와 괴롭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나 노동, 생활 전반에 끼친 영향 같은 것들은 불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정보가 된다. 차별 경험은 조각으로 흩어지고 왜소해진다. 성희롱은 제도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강조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되었지만 성희롱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성적 호감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행은 여전히, 제도와 관행의 어긋남 속에서, 차별 행위자의 권력 남용과 성차별, 성적지향 차별, 모욕, 괴롭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성희롱을 중심으로 한 차별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다만 ‘요즘 여자들은 무서우니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펜스룰이 시급한’ 근거로 남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조직에서의 향후 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도, 당해 사례의 해결조차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안 중에는 하나의 정체성이나 차별 사유에 제한되지 않고 차별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합차별 개념이 도입되었다. 장혜영의원안은 두 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복합차별은 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체성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고유한 차별의 경험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복합차별은 이미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의 합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해석에서도 실익이 있다고 본다. 복합차별 사례는 각 정체성을 구분하여 판단할 때 어떤 사유도 차별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 개별 사유에서는 차등 대우는 있지만 각기 ‘합리적인’ 차등 대우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차별을 판단하는 방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때에는 여러

차별 사유가 함께 작용하는 교차성 분석을 통해 차별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차별로서 인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고 기록되는지는 당해 사건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례들의 해석은 누적되면서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해석하는 언어를 제공하며, 차별의 해소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를 남긴다. 차별금지법이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차별의 지배체계를 파악하고 평등실현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도, 구체적 차별 사례들이 차별시정의 실효성 차원에서 선택된 ‘대표적’ 차별 사유만으로 축소되지 않고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3. 성차별의 근간으로서 이분법적 젠더규범에 저항하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평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체계에서는 여성은 오직 여성으로서만 차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성차별은 ‘남녀차별’이고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성차별과 무관하며 각기 독립적인 사유들로 평가되기도 한다. 성적지향은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만 관련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만 관련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생물학적 남성’과 구분하며,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배척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성차별은 너무도 명확하게 태생적으로 결정된 이분법적인 ‘생물학적 성별’의 문제로 간주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는 페미니즘의 주된 과제였다. 페미니즘들은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성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기도 했고,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차이를 차별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와 권력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여성의 차이가 갖는 가치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단 두 개의 생물학적 성별 구분은 실재하는 것인가. 사회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여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성별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성별 중 하나에 속한다는 관념은 그 자체로 사회적 구성물일 뿐 아니라 오랜 차별의 근간이 되어 왔다. 성별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역동적인 연속체로 이해해야 하며, 남성과의 다름이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기에 앞서, 차등적 가치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젠더 범주를 해체함으로써 성차별에도 더욱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 범주에 대한 문제제기는 흔히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만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차별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등을 사유로 한 차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레즈비언의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성에게 특정한 행동과 말투와 외모를 요구하는 성차별과 분리할 수 없다. 젠더이분법을 교란하는 존재로서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폭력 또한 시스젠더 여성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연속선 위에 있다.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개인에게 그 중 하나의 성별을 할당하며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고 할당된 성별에 부합하는 성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젠더규범은 이 모든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젠더이분법과 할당된 ‘차이’를 그대로 둔 채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로는 형식적 평등에 ‘배려’와 ‘혜택’을 덧붙인 형태의 평등 개념 언저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여성의 차이’에 아무리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더라도 ‘차이’는 결국 여성과 남성이 같을 수 없다는 본질주의로 귀결되며, 요구되는 성별의 ‘특성’에 부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쉽게 차별의 대상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성평등의 방향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렇게 선별된 여성을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제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를 통해 구현되는 차별의 구조를 발견하고 맞서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 사유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체계에서, 성차별은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별 사유들과 상호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4. 통합적 평등 정책 마련의 시작점으로서의 평등법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종종 다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남겨 두기를 택한다.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점차로 확대되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를 넓힌다. 육아휴직의 연령 상한을 높이고 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는 법 개정이 계속되는 동안,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오히려 소수라는 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를 한다는 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공공 부문, 대기업 여성 근로자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안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또한 재생산의 권리를 향유해야 마땅하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노동과 재생산은 ‘여성’ 정책과 연구에서도 관심 영역 밖에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수도 아닌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이 가족으로서 주거와 육아 정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에서 기본값의 위치를 지키는 동안, 그 외의 가족이나 가구 구성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그러므로 곧 ‘정상가족’으로 편입되어 지원의 대상이 될 예정인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삶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소화되었다. ‘나중에’는 성소수자에게만 적용된 언어는 아니다. 실로 많은 이들은 ‘보편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영역에 버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평등과 차별이 각각의 사유에 갇혀서 사고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정체성에만 집중한 결과,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조차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을 위한 정책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획득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도 ‘보편’이라는 언어를 전유해왔으며 성 차별의 근간에 가닿지 못했다.

모든 차별사유를 아우르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이해에 다가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이해는 단지 개별적 차별 사례에서 차별을 해석하고 시정을 모색하는 데에만 반영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평등 정책 마련에서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평등

법' 이어야 한다. 평등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평등을 '주류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할 수 있다. '취약한' 집단의 요구를 몇 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에 인권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을 통해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평등법을 통해 한국사회에 평등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사후적 법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 변화를 도모하며,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이후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안과 장혜영의원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⁵⁾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피해 사례의 구제를 넘어서 평등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등권을 확인하고 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항목은 더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 중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평등권을 비롯한 권리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평등 실현을 위한 계획과 추진체계, 기본시책 등을 좀더 상세하게 두고 있다(아래 도표). 2013년 발의되었던 최원식의원안⁶⁾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두어 차별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했다.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의 양성평등한 대우 및 생활 영위 권리]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국가기관등의 의무]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 시책 마련 노력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차별 방지, 권리 구제,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강구 의무]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 차별 금지 의무]
국민/모든 사람/사용자/교육기관 등의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 의무]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실태조사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장차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5) 기본계획 또한 '차별시정' 기본계획이 아닌 평등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일 2013.2.20., 의안번호 1903793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기본시책 기금 기관 지원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제16조 성인지 예산 제17조 성인지 통계 제18조 성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의무] 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의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이 마련해둔 도구들이 그동안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 ‘성별영향’ 평가 같은 원대한 계획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형식적, 기계적인 적용의 탓에 자주 직면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모든 정책에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 의제’를 끼워넣기 하는 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여성 의제’ 중에서도 기존의 젠더규범에 부합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는 ‘안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채택이 된다거나, ‘성인지’가 여성과 남성의 형식적 평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데 그친다거나, 정책과 법령의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 평등을 확보하자는 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드물지 않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사회약’으로 불리는 적극적조치 중에서도 공무원 임용에서의 적극적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평등 실현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평등이 제대로 해석되고 구현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4. 보호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연대의 동료로

여성을 취약성의 범주에 밀어 넣고 보호 대상으로 둘 때 온정적 가부장주의는 평등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젠더권력 자체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화하는 보호는 오히려 젠더권력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요구는 ‘평등 실현’의 신호인 양 읽혔고, 곧바로 ‘역차별’이라는 거부에 직면했다.

젠더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피해자성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자격을 요구받는다. 젠더폭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했던 성적 자기결정의 역량은 역설적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멀어지도록 한다. 아내폭력 피해자가 가해남편에게 대항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학력이어서, 청소년이면서 성적 욕망을 드러내서, 장애가 경증이라서, 성경험이 많아서, 성을 거래해서 등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지위를 부정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호의 자격이란 여성을 다시 온정적 남성에게 의존하고 보호를 구하며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통제의 틀 속으로 되돌려 보낸다. 젠더폭력이 의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다.

‘여성’의 이름을 부여받은 가상의 ‘보편’ 외의 여성들 또한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려면 일단 취약성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여성정책 연구는 종종 장애여성,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을 취약성 차원에 서만 다룬다. 그런 다음 그들의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룬다. 아동,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도통 진전이 되지 않는다. 아동,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에게는 비난 여론이 높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관심 영역 밖에 있다. 취약집단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보호받으므로,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언어를 갖지 못한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

권리는 기득권자가 자격을 따져가며 선심 쓰듯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권을, 그리고 평등을 통해 인간 존엄과 자유권과 사회권을, 정치적 기본권과 청구권을, 즉 모든 기본권을 돌려주는 것을 향하는 평등법이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I. 들어가며

7년의 침묵을 깨고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2007년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정부안이 처음 발의된 후 여덟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장혜영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23가지 항목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곧 이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에서 인권위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 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21개 항목을 차별금지 유형으로 발표하였다 <표 1>.

2007년 첫 정부안 발의 이후 한국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서의 차별에 대한 참여한 갈등과 보수단체의 압력 등의 이유로 법안이 자동폐기되거나 본회의에서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특징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이 14개에서 23개의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단 두 개의 항목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집중된 관심을 받았다. 반면 이주배경에서 비롯한 다양성에 관한 차별금지사유는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등 다중항목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의미와 논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비하였다.

지난 14년동안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진보진영 정당이나 의원안, 정부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의안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면적 ‘합의’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주배경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다소 조용했다.⁷⁾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장애, 나이 (고령), 학력 및 출신학

7) 이 글에서 이주민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온 사람을,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교에 기반한 차별, 임신부, 여성 등에 대한 성차별,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해서 별도 법안이 발의되었고 일부 법안은 제정되었다 <표 2, 표 3>.

의안명 (제안일자, 발의국회)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법 정부안 (2007.12.12. 17대 국회)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차별금지법 노회찬 대표발의안 (2008.1.28. 17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病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등
차별금지법 박은수 대표발의안 (2011.9.15. 18대)	성별·연령·장애·병력·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
차별금지법 권영길 대표발의안 (2011.12.2. 18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법 김재연 대표발의안 (2012.11.6. 19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법 김한길 대표발의안 (2013.2.12. 19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病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차별금지법 최원식 대표발의안 (2013.2.20. 19대)	성별·연령·장애·병력·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차별금지법 장혜영 대표발의안 (2020.6.29. 21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病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정부 (인권위) 시안 (2020.6.30.)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病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표 1] 포괄적 차별금지 관련 16대-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따라 국민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리킨다. 이주배경 주민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주민과 이주민의 후손(한국과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모두를 포함)을 가리킨다. 이주배경 주민은 외국국적일 수도, 한국국적일 수도(귀화와 선천적 한국국적자 포함) 있다.

차별금지항목	의안 명
학력, 학벌, 출신학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 성희롱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출신지역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정보소외계층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여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임산부 차별금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표 2] 포괄적 차별금지 외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해 16대-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법률명	제정일	비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88.4.1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12.21.에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2.7.1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08.3.21.에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1996.7.1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11.19.에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4.10	

[표 3]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단일분야 법률

이 같은 침묵과 무관심은 ‘인종’과 같은 모호한 사회적 개념이나 다종의 차별금지사유로 인한 복합적 차별의 복잡성에 비하면 적절치 않은 것이다. 특히 장애인법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국적’ 항목이 차별 금지사유로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적이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하는 중요한 잣대이고, 국적을 가짐으로 참정권에서부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정당화 되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제문은 국적없음과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이주배경 주민을 향한 복합차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세계화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배경 주민에게 복합적인 차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고한다. 먼저 2장에서는 교차이론의 접근방식으로 복합차별을 조명하고 3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복합차별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4장에서는 이주민 여성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차별의 복잡성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교차성(intersectionality)으로 접근한 복합적 차별

1989년 미국의 법학자 킴벌리 크렌쇼 (Kimberle Crenshaw)가 처음 사용한 교차성 개념은 30여 년 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유행어(buzzword)’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교차성이론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신경아 2017, 박미선 2014, 권수빈 2020). 크렌쇼는 미국의 흑인여성주의에 기반하여 흑인 및 유색인종 여성을 계급, 인종, 젠더 (가난하며 유색인종인 여성)의 교차지점에 위치시키고, 그 교차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억압의 고유한 모습에 관해 서술했다.

교차성 개념은 사회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복잡한 사회이론이 되었지만 (McCall 2005) 사실 교차성 개념의 초기 옹호자인 크렌쇼와 그의 동료 마리 마츠다(Mari Matsuda)는 법학이론인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에 착안하여 개념을 만들었다. 특히 CRT는 자유주의에 근거한 법 제개혁 중 ‘인종맹검접근법(race-blinded approach)’을 따른 공정성, 정의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접근법이 ‘인종’ ‘성별’ 등으로 인한 불평등은 ‘특이상황’이며, 이러한 일시적인 특이 상황을 극복하면 법이 ‘본연의’ ‘정상적인’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체성정치 학계가 인종, 젠더 등이 없는 완전한 통합을 사회적인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남성위주 백인우월주의로 인한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비판하였다 (Crenshaw 1991). 그는 오히려 인종의식적(race-conscious)이고 젠더의식적(gender-conscious)인 조직화를 통하여 ‘흑인여성’ 혹은 ‘유색인종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가시화 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직화를 통하여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enshaw 1991).

크렌쇼는 교차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1989년 논문에서 흑인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관련 세 개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Crenshaw 1989).⁸⁾ 세 사례 모두 흑인 여성이 당한 피해가 명확하였지만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성은 같은 종류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Civil Rights Act)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 개의 판례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DeGraffenreid 외는 자동차회사인 GM에서 근무하던 흑인여성 실직노동자들로, GM이 불경기를 이유로 근무자를 연공서열의 법칙(seniority rule)에 따른 해고 조치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흑인 여성들이 이 같은 조치에 문제제기한 이유는 해당 GM 공장에서 1964년 이전 흑인 여성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고, 불경기가 닥치자 70년대 이후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64년 이후에나 해당 GM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흑인 여성은 다른 노동자 집단에 비해 70년대 이후에 고용된 비율이 높았고 따라서 실직률도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집단소송을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GM공장에서 (백인) 여성을 오랫동안 고용했으므로 여성을 상대로 차별했다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흑인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는 흑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임으로 그 소송과 병합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원은 해당 GM공장에서 흑인 여성을 흑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용하고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이 차별의 주체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판례를 통하여 크렌쇼는 인종차별 담론은 흑인 남성의 경험에 주목하고 성차별 담론은 백인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고유한 경험은 비가시화되고 단층적인 차별금지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8) 세 개의 판례는 1) DeGraffenreid v. General Motors, 2) Moore v. Hughes Helicopter, Inc., 그리고 3) Payne v. Travenol 이다 (Crenshaw 1989)

크렌쇼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 젠더, 계급의 “삼중억압(triple oppression)”의 역동성에 주목했다면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구조와 차별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에서는 ‘인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 ‘인종’보다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Lutz 2002). 사회학자 헬마 루츠는 유럽의 맥락에서 교차성을 설명하며 성적지향, 종교, 나이, 장애, 사회경제적 신분, 인종·민족·종교적 소속 등 “14개의 대비선(14 lines of difference)”을 파악했다 (Lutz 2002,13). 이는 차별요인은 각 사회에 고유한 것이며 그 의미는 사회적 담론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주배경 여성을 향한 복합차별은 어떤 양상을 띠는가? 다음 장은 한국사회의 이주 정책과 이주민 상황을 설명함으로 4장의 사례연구에서 보여지는 복합차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III.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했다. 이 중 남성이 130만여명, 여성이 120만명 가까이 차지하여 표면적으로 비슷한 성비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 남성은 비전문취업 (혹은 고용허가제도, E-9, 253,848명), 재외동포 (F-4, 222,007명), 방문취업 (H-2, 136,533명)등 외국인력 비자(E-9과 H-2)에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외국인 여성은 재외동포 (F-4, 242,145명), 결혼이민 (F-6, 106,785명), 방문취업 (H-2, 89,789명)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결혼이민(F-6)사증 소지자의 81%가 여성인데 비해 고용허가제도(E-9)사증 소지자의 92%는 남성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 남성 주민은 이주노동비자 소지자와 외국국적동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외국인 여성 주민은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사증은 특정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제공되는데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⁹⁾

이주여성은 아래 분야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1. 일자리 취약성

외국인력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주여성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취업활동을 하고(최윤정의 2019), 이주 여성은 돌봄, 예술흥행, 농업 분야에서 성별화된 고용시장을 경험한다. 중국동포여성은 아이돌보미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으로 돌봄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예인 및 공연자(유흥주점 공연자 포함)와 운동선수에게 발급되는 예술흥행(E-6)사증소지자의 78%가 여성이다. 일반 비전문취업(E-9) 사증소지자의 단 8%만이 여성인데 비해 농축산업분야 비전문취업(E-9-3) 사증소지자 중 여성은 33%에 달한다. 노동환경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돌봄, 예술흥행, 농업분야에 이주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특이하게도 공식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으로 분리된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 중에는 남성이 10%가량 더 많았다. 재외동포사증 소지자 중에는 여성이 약간 (4%) 더 많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단순노무직종에서 일할 확률이 내국인보다 두배 이상 높다 (최윤정의 2019). 또한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상용직 비중은 매우 낮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은 월등히 높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데도 상용직 보다는 계약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용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가 있음을 알려준다.

2. 폭력 취약성

이주여성을 향한 폭력은 폭력상황 유발자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이 높고, 그 의존성향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권력우위에 있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 의존도가 높는데, 이는 비단 한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더 높거나 한국사회에 대해 더 잘 알아서일 뿐만 아니라, 혼인유지여부와 배우자의 지원이 여성의 체류자격과 한국 국적 취득여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노동비자를 소지한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고용주가 직장과 소득을 결정할 뿐 아니라 체류자격의 관리를 맡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우위 상황에 있다. 체류자격의 취소는 본국으로의 입국(혹은 미등록체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주는 단지 현 직장과 소득을 결정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미래의 직장과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서비스 접근 취약성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중 77%가 동부, 23%가 읍면부에 거주했다 (최윤정의 2019). 전체인구의 3/4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내국인에 비해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청 2020).¹⁰⁾ 여성 이주농업노동자의 숫자도 감안하면 특히 농촌지역에서 젊은 외국인 여성의 모습이 빈번히 보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여성은 언어능력과 한국의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사회서비스 접근성에서 내국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취약점에 농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인프라까지 더해진다면 의료, 신변 안전, 경제적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4장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에 대해 서술한다. 첫 번째 사례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농업이주여성노동자 ㄱ씨가 사망한 사례로, 그의 성별, 거주지역, 주거환경, 고용형태, 그리고 체류자격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어떠한 복합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사례는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으로 알려진 사례로,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피부색등 외모와 출신국가, 직업 등 인종의 복잡한 구성을 살피고 젠더, 성규범과 인종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세 번째 사례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통해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출신국가, 성역할과 젠더폭력의 관계를 살핀다.

10)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19%가량이 읍면부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국인) 읍면부 거주자의 대부분이 고령임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가 대부분인 결혼이민자는 같은 나이대 내국인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http://m.kostat.go.kr/board/file_dn.jsp?aSeq=384691&ord=1

IV. 사례를 통해 보는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1. 농업이주여성노동자와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의 사망사례

한파가 몰아닥쳤던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주 노동자 ㄱ씨가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이주노동자 숙소는 평소 난방장치 고장이 잦았던 곳으로, 당시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가 계속되어서 그의 동료들은 추위를 피해 다른 숙소로 이동하였고 사망한 날에는 ㄱ씨 홀로 숙소를 사용했다. ㄱ씨의 비극은 그가 저소득국가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이며, 여성이며, 고용주에게 귀속적인 고용허가제도의 농업노동자인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환경과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노동환경, 사회적서비스 분야에서 복합적 차별을 관찰할 수 있다.

성별, 거주지역과 주거환경

인권단체 등은 여러 해 동안 농업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거주에 관해 문제제기하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가 정한 숙소 최저기준(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마련 등)에 못 미치는 곳이 31.7%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숙소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성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성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소라미 외(2016)는 농업이주노동자의 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12.4%가 성폭력을 경험했고 36.2%가 다른 여성의 피해사실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들이 경험한 성폭력은 언어적 성추행에서 지속적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한국인 고용주, 관리자, 또는 동료노동자로, 고용상 위치나 선주민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피해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 및 주거환경 때문에 성적위험을 느꼈다. 그들은 고용주가 업무시간 외에도 숙소로 찾아가 추근거리고 일과 거주지가 분리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잠금장치와 공용 혹은 옥외 화장실도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체류자격, 고용형태와 노동안전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다. 외국인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그마저도 직접적인 인권침해상황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 이동에 대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도로 한국에 온 농업이주노동자는 농업 외 다른 산업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농업 분야는 산업 전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낮은 데다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있다 (김기돈 외 2013). 휴일은 불규칙적이고 낮은 임금을 받는데 고용주가 높은 비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비를 책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열악한 고용환경은 농업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사회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구씨가 의료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의 사후에 알려졌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인 의료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제조업이나 건축산업 이주노동자와 달리 농업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용주가 많아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농업이주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장의료보험과 달리 지역의료보험료는 노동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소득등에 기초한 감면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설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장시간 일하는 데다가 직장 및 주거지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립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구씨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수 있다.

2.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보이지 않는 연예홍행비자 소지 이주여성

2011년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구수진(본명 쿠르바노바 클라브라다)씨가 부산시 초량동에 위치한 목욕탕에 입장하고자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다. 구씨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꺼내 항의했지만 사업주는 구씨의 외모가 외국인이고 목욕탕이 ‘외국인 금지 시설’이라 설명하며 출입을 막았다. 사업주는 다른 목욕탕 손님들이 ‘AIDS에 옮을까봐’ 외국인과 함께 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국인을 받기 시작하면 내국인 여성이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이주민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언론에 주도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인종차별에 관해 얘기했고,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로 살아갈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구씨의 사례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출하였고 2011년 11월 25일 인권위는 목욕탕 사업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목욕탕 사업주에게 인종을 이유로 시설 입장거부를 하지 말 것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7570사건 결정문).



그림 1 초량동 텍사스거리 (출처: 2013년 저자 촬영)

보이지 않는 피해자: 유흥업소 종사 이주여성

구씨의 차별경험은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지만 목욕탕 주인이 왜 외국인 여성이 AIDS를 옮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설명한 기사는 없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구씨의 사례는 한국인 남성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부당하게 인종차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위 결정문은 구씨의 입장거부가 목욕탕 주변에 다른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위 조사에서 목욕탕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업장 바로 앞쪽이 성매매 집결지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외국인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출입을 허용하면 오히려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이며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한 향후에도 외국인을 받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7570사건 결정문, 2쪽)

문제의 목욕탕은 초량동 부산역과 ‘차이나타운’ 근처 ‘텍사스거리’에 위치하였다.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국 영사관이 부산에 자리한 후 그 근처에 점포들이 자리하면서 ‘청관거리’라 불린 것을 시작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상징적인 긴 역사를 가졌다. 한때 냉전의 영향으로 한국거주 화교의 입지가 좁아지며 쇠퇴하였다가 195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하며 ‘텍사스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80년대 말 이후 미군의 출입이 뜸해지며 슬럼화 되었다가 90년대 이후 러시아인 선원, 2000년대 이후 동남아국가 출신 이주노동자가 늘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점포가 증가하였다 (김나영 2011).

구씨가 입장하려 한 목욕탕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다수 있고 미군, 러시아인,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부산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초량 텍사스’를 성매매 집결지로 기록했다¹¹⁾.

다시 말해 구씨가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다른 인종’의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처 유흥 및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을 ‘출입금지’ 하였는데 애꿎게 결혼이주민인 구씨가 피해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구씨가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인 귀화외국인으로 미디어의 많은 주목을 받은 반면 초량동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미디어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역할과 성도덕관념에 따라 ‘차별 받으면 안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유흥업소 종사 이주여성의 비가시화는 목욕탕 출입금지라는 일상생활 속 사소한 차별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보도에서도 이어진다. 한국에서 예술흥행사증을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¹²⁾ 2001년에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되며 외국연예인 도입방법과 대우에 대한 개선방법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2014년 발간된 인권위 보고서는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병렬 외 2014).

둘째, 러시아출신의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인종’이라는 차별금지사유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에서 보이는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흑인 및 유색인종차별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권위 결정례 중에 ‘only white person(백인만)’ 혹은 ‘Caucasian(코카시안)’일 것을 요구하며 백인 영어교사를 구인한 유치원에 대한 사례가 있다. 인권위는 광고를 낸 고용주들에게 시정과 인권교육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891600사건 결정문, 15진정0349400사건 결정문).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은 인종과 성별, 출신 국가, 계급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민주(Lee 2021)는 한국에 온 서구출신 백인 여성 관광객들이 클럽 등에서 ‘러시아인이냐’라고 물으며 접근하는 한국 남성들을 마주한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러시아인’이 성매매여성임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같은 피부색이라도 출신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또 개인의 직업 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인종화 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흑인이라도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나 서구 국가 출신이나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인종’이라는 단일 항목이나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통해서 처리하기 어렵다.

셋째,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인종적인 것이다. ‘외국인 출입 금지’라는 목욕탕 주인의 설명에 구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한국국적을 들어 항의했다. 외국인은 사전적, 법률적 의미로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맞다. 하지만 사업주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에 따라 한민족(또는 한민족의 외관을 가진)인 사람을 가리켰기에 국적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았다.

11)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2019. “성산업 지도” https://wom-survivors.or.kr/bbs/board.php?bo_table=B34&wr_id=38 (마지막 접속 2021.5.5.)

12) 예술흥행(E-6) 사증은 예술인,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운동선수등에게 발급되는데, 이 중 E-6-2 사증은 호텔·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이나 연예활동을 하는 이에게 발급된다. E-6-2 소지자 중에는 공연 및 연예활동을 핑계로 고객행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대거 있고 인신매매 정황도 발견되었다. E-6-2사증 소지자는 기타 사증 소지자에 비해 근무지 이탈과 미등록이주민이 될 확률이 높는데,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이 너무 힘들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적이라는 더욱 취약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병렬 외 2014).

비슷한 예로 인권위에 제출된 차별진정사례 중에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 3인이 클럽에 입장하려는데 인도계 미국인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예가 있다. 사업주는 주류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받을 경우 다른 문화로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내국인만 받는다’는 영업방침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류판매시설에 외국인 출입제한 예외를 두던 이전 판결을 뒤집어 사업주에게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521300사건 결정문). 주목할 만한 것은 위의 사건에서 한국계 미국인은 어떠한 제재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의 의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바, 향후 외국인이란 표현과 인종화의 관계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 남편에게 살해된 중국동포 리씨, 국적, 가정폭력

2012년 7월 2일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국국적 동포 리씨가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리씨는 살해 당일 가정폭력의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상담 및 형사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서 경찰에 안이한 대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¹³⁾ 2005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리씨는 남편이 그녀의 중국국적을 ‘약점’ 삼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가 ‘불법체류자’이며 ‘밀입국’자라고 헐뜯었고, 그녀의 집 곳곳에서 가정폭력의 흔적이 드러났다.¹⁴⁾

리씨가 한국에 7년이나 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따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혼이주민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귀화신청시 ‘신원보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2019년에는 전남 영암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폭행장면을 녹화하였다. 여성의 안정적인(영구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것이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신원보증의 문제점이 또 한 번 지적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설명자료를 발행했다. 설명자료에서 이전에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시 배우자가 동반출석 및 신원보증을 해야 했으나, 동반출석은 2006년 4월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제도는 2011년 12월에 폐지되었고, 2007년 11월 이후 귀화신청 시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자세하게 밝혔다.¹⁵⁾

성별, 결혼, 국적

신원보증제도와 결혼이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부장제와 국적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1997년까지 남성만이 자신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국적을 따라야 했다. 이와 같은 남녀차별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고 한국이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비준하며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1997년 12월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법개정으로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국적

1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추모집회 자료. 2012.7.18.

14) 박훈상, 김성모, 2012.07.05, “경찰이 방범창 뜯는새 조선족 아내 비명이...”,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705/47538290/1>

15) 법무부. “[해명자료]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 신원보증 필요” 보도관련 해명”. 2012.7.6

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적법 개정은 남녀평등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 이유를 밝히며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국적을 자동취득하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위협하는 이유로 보았다.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¹⁶⁾

2012년 리씨가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발행하여 신원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리면서 다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남녀 불문)와 함께 동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¹⁷⁾ 하지만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권고’와 ‘요구’의 차이를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성별, 출신국가, 사회적 신분

이처럼 법무부에서 위장결혼 방지에 힘을 쓰는 것은 결혼이주민이 ‘입국과 취업의 방편’으로 결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Lee 2017). 결혼이주민이 의심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결혼이 아니고는 한국에 입국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 출신이라는데 있다. 고소득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저소득 국가 출신이라면 단기체류라도 입국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유럽이나 북미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정부는 결혼이주민에게 영주자격을 입국 후 조건적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은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처음 입국하며 이후 1-3년 간격으로 체류자격연장을 해야 한다. 때문에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체류자격 연장시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혼인의 유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때때로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Lee 2017).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혼인해소 후에도 결혼이민비자(F-6)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지만 체류자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부부강간죄의 첫 피해자로 인정받은 결혼이주여성은 이혼 후 F-6자격으로 한국에 남았지만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갑작스런 실태조사 후에 비자연장을 불허당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실태조사에서 전 남편의 식구들의 얘기만 듣고 여성이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비자연장이 허가되었다¹⁸⁾.

출신 국가의 소득수준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정·개정이유 (시행 1998. 6. 14., 1997. 12. 13. 전부개정)

17) 1쪽, 법무부, “[해명자료]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 신원보증 필요” 보도관련 해명”. 2012.7.6.

18) 법무부, “[설명자료]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 보도관련 설명”. 2013.9.4.

하는 것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내국인 남성은 애초에 언어, 가족 및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제도에 대한 지식 등에서 외국인 여성보다 우위적 권력을 갖기 마련이다. 남성 권력과 내국인으로서의 입지에 경제적인 불균형까지 더해져서 혼인 관계에서 평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 내 권력 불균형과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불안정성이 가정폭력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체류자격 불안정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인정하고 정책개선을 한 해외사례가 있다. 2017년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실시한 ‘조건부 영주자격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을 폐지했다. 조건부 영주자격은 교제기간이 2년이거나 아이가 없는 커플에 한해서 시행되던 제도로 결혼이민자가 2년동안 조건부 영주자격을 가지고 혼인 및 동거 관계를 유지해야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정책개정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가족결합, 젠더평등과 젠더 폭력퇴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 설명했다. 2년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권력의 불균형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민자를 폭력에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¹⁹⁾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다. 아내살인이나 가정폭력사건에 ‘존재하지 않는’ 신원보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불안과 젠더폭력의 취약성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출입국 통제와 국경수호라는 명목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V. 나가며

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이주배경 주민과 관련한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논의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지난 14년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표면적으로 보면 보수, 진보진영 정당이나 의원안, 정부안을 막론하고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종’과 같은 모호한 사회적 개념이나 다중의 차별금지사유로 인한 복합적 차별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심히 부족하였고 단층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이 글은 마지막 장에서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농업이주여성노동자 ㄱ씨가 사망한 사례로, 그의 성별, 거주지역, 주거환경, 고용형태, 그리고 체류자격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미친 역할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출신으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 농촌에서 일한 가난한 노동자였다는 그의 교차적인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그의 최후를 야기했다.

두 번째 사례로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는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국적과 상관없이 피부색과 출신국가의 이유로 인종화된 과정을 보여

19) Government of Canada. “Notice – Government of Canada Eliminates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2017.4.28.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eliminating-conditional-pr.html>
(마지막 접속일 2021.5.6.)

주었다. 이후 지역적 특성과 미디어 등 권리담론에서 제외된 유흥업소 종사 이주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젠더, 성규범, 직업과 인종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통해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출신국가, 성역할과 젠더폭력의 관계를 살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저소득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위장결혼’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한 체류자격은 결혼이주여성을 가정폭력의 상황에 몰아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살해당한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하여 드러났다.

2020년 발의된 장혜영안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국적’ 항목이 차별금지사유로 새로 추가되었다. 국적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조건인 데다가 ‘국민’이 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주체인 것을 볼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국적없음과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이주배경 주민을 향한 복합차별을 관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라는 단일조건으로 이주여성을 향한 복합차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성별, 출신국가, 고용상태, 피부색, 혼인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역학관계를 고려해야만 이주여성을 향한 복합차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 역할, 성 기반 폭력, 성 규범을 포함한 젠더에 대한 논의, 출신국가와, 고용형태, 직업등을 포함한 계급의 의미에 대한 논의,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인종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빈. 2020. “청년세대 연구에 지역이라는 교차로 놓기: ‘지방대학생/지방청년’에 관한 학술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7(4): 53-90
- 김나영. 2011.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 간의 길항” 『역사와 경계』78: 35-63
- 민지원. 2019. “난민 자격으로서 젠더와 성적 지향의 교차성 : -우간다 난민신청자 판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11(2): 121-152
- 박미선. 2014. “여성주의 좌파이론을 향해서 - 흑인 페미니즘 사상과 교차성 이론” 『진보평론』59: 105-12
- 소라미, 김정혜, 김지혜, 류경혜, 허오영숙, 문유진.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신경아. 20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교차적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33(4): 77-118
- 이병렬, 김기돈, 김사강, 김소령, 김이찬, 윤지영, 이한숙, 박정형. 20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병렬, 김연주, 박정형, 윤명희, 이혜진, 홍세영. 2014.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renshaw, Kimberle.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139-167.
- Crenshaw, Kimberle.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McCall, Leslie. 2005.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30(3): 1771-1800
- Lee, Min Joo. 2021. “Riding a White Horse : South Korean Men’s Fantasies for Hypersexualized White Wome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Annual Conference, March 26, 2021, Online.
- Lee, Sohoon. 2017. *Migrant Women between the Law: Bargaining Kinship, Labour, and Space-Time Borders in South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Sydney.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차별경험, 위축감, 불쾌감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감정이 ‘장애’가 이유인지, ‘여성’이라서인지, ‘나이’ 때문인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라서인지, ‘가난’해서인지,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이 없어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분명한 건, 이 사회의 구조, 환경, 인식이 장애여성에게 차별을 경험하게 하거나 위축과 불안, 불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페미니즘을 만나고 교류해 왔다. 장애여성운동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사회적 소수자들과 삶과 연결하고 연대하는 시작이었다.

나는 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까? 장애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의 부모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다. 아버지는 장남이 아니라서,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부모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가난은 기본값이었다.

부모의 가난은 자녀의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고, 왜 자녀가 아픈지도 모른 채 찾아간 병원에서는 소아마비 균에 감염되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장애판정을 했다. 가난한 부모는 치료나 재활훈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요법을 더 찾았고 기적을 바라며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목사를 찾아갔다. 그렇다면 나의 장애는 부모의 가난과 무지의 탓인가? 아니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가 국가로부터 배제된 것인가? 취약한 사람이 위기가 발생할 때 더욱 취약해지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였다.

내게 주어진 가족의 가난한 경제적 상황은 나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 국가의 사회서비스는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도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갖게 한다. 나의 장애를 “당신의 죄”라고 생각했고 평생 동안 미안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24살에 나를 출산했다. 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니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으니 출산을 했고 출산을 했으니 양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다. 성교육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도 받아 본 적 없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오로지 의무만 부여된 어머니에게 장애가 있는 딸은 고통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죄인처럼 투명인간처럼 가족 곁에 머물러 있었다.

아직도 자녀의 장애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많은 여성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대개 비장애남성보다 비장애여성이 장애에 대한 긴장감이나 감각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장애에 두려움, 불안,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되면 자신의 부주의와 부덕을 생각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감정과 인식을 갖게 되는 배경도 사회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역할규정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가. 장애와 환경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16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초중고, 대학까지 교내 장애인편의시설은 전혀 없었다. 늘 난간을 짚고 계단을 올라서 교실로 이동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올랐다. 비장애학생에 비해 1시간이상 일찍 등교 준비를 해야만 했었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까지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두세배는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공부에 쏟는 에너지가 부족했고 학업 경쟁에서는 밀려났다. 이러한 부담한 상황에도 말을 하지 못한 것은 학교공동체에서 추방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보다 환경에 적응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장애를 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순응은 고통스러웠고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장애’를 뼈아프게 느꼈던 시기로 기억한다.

장애인 운동의 저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긴 시간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누적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천이었고 생존과 존엄의 문제였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투쟁,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 장애인 탈시설 투쟁 등은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그 결과로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법 등이 제정되고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운동은 성인지감수성과 장애여성의 입장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투쟁의 방식과 내용이 폭력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적이었다. 지하철 점거, 쇠사슬을 이용한 신체결박, 도로점거, 노숙농성, 단신농성이 남성중심적인 투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장애여성의 소외를 주장했다. 우리사회에서 비가시화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주장과 폭력적인 남성중심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이 토론되었다. 토론의 결과는 투쟁방식의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장애여성운동으로 페미니즘을 고민할 때,

장애여성은 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은 성적 존재로서 주체로서 성차별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어쩌면 차별의 시작점으로, 장애여성은 다른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낙인찍혀 타인과의 관계,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차단당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성적인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으로 페미니즘을 만나 장애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장애여성 그룹에서 장애여성이 ‘여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성역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다. 임신, 출산,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별로 정책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태도는 장애인으로 범주화되고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장애여성은 “여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여성 차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비장애여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장애여성도 누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개인적 의견은 장애여성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선후의 문제라기보다 장애여성의 경험이 존중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에 따른 역할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는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가사 지원을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여성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혼인으로 가구의 여성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비장애여성과 결혼한 장애남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여성만의 역할로 고정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만난 피해자들 중에는 발달장애여성이 대다수였다. 발달장애여성은 인지의 제한성이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상대와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행동 특성을 드러내는 자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상황에 따른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장애특성상 발달장애여성은 관계에서 쉽게 종속되기도 하고 통제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성차별을 기반해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은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겪게 된다.

성폭력피해 발달장애여성을 지원하면서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것은 ‘평등한’ 관계 설정이었다. 발달장애여성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주체로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다. 이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력하는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들에게도 어려운 고민이었다.

반성폭력운동 진영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를 이용하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법원의 해석이 엄격해 가해자 처벌의 공백이 있어, 항거불능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항거불능을 삭제하고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자를 처벌하자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법원의 판례태도를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처벌의 공백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제한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토론과정에서도 발달장애여성 피해자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감수성과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발달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에서 장애차별적인 구조와 성차별적인 구조를 인지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체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하고 사건을 의미화하고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투운동이 시작된 2018년, 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되었다. 장애여성으로서 비장애여성 활동가가 다수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위축과 고민이 있었는데 미투운동이 촉발되어 단체의 성격상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되었다.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단체의 대표성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맡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나 어색함이 있었다. 통상의 여성단체의 대표라는 인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준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중에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단체의 대표로서 대책위를 꾸리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나의 ‘장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면 기자회견이 열릴 때 휠체어를 타고 가야할지 힘들지만 서있어야 할지, 피해자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나의 ‘장애’가 장벽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언론을 상대할 때 나의 ‘장애’가 무능력함이나 동정적 시선으로 머물게 하지는 않을까 조심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여성운동의 주류적인 흐름에 장애여성 리더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도나 기회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오늘 발제한 에피소드는 내가 장애여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들 중의 몇 장면들이다. ‘다르다’ 혹은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장벽을 마주하는 일은 일상적이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할 때 사전에 그 동선을 체크하고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를 계획하는 것, 걸어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마주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평정심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감수해야 할 신체적인 접촉을 허용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지독한 상황도 참아야 하는 것. 이러한 일상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와 인식을 인지하게 한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개인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무엇이 차별인지를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으로 제도화 될 수 있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상황은 치참하다. 갈등과 분열은 차별의 언어를 넘치게 하고 차별의 인지를 더디게 한다.

페미니즘의 가치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감각은 모든 사회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혐오를 반대하고, 페미니즘의 실천은 차별을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페미니스트로서, 정치인으로서, 장애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은 일상에서 차별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그 감각을 알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추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장혜영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작년 6월29일 대표발의했다. 2007년부터 꾸준히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보수기독세력 등의 반대세력이 국회를 압박하여 폐기되고 철회되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해설은 많은 공론의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고 정의당도 논의된 내용을 충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차별사유와 차별의 영역, 차별시정기구, 차별구제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에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치인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고 실정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생각해보면 더욱 절박하다. 코로나19로 장애인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죽어간 장애인,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 이주노동자, 실종된 발달장애인의 죽음,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고 변희수 하사와 고 김기홍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중첩으로 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차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이유

• 추지현(서울대 사회학과)

1.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이유

- 왜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가에 대해 응답해야하는 생경한 현실, 한편으로는 자명했는가에 대한 질문
- 발제문: 성차별 의제가 평등과 반차별을 위한 각종 정책 대상의 중심에 놓여왔지만 사회적 가치로서 평등이 통합되지 못해온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 + 평등을 형식적, 기계적 평등 이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가 ‘우선’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
- 덧붙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집중 속에서 법안의 자동폐기, 철회가 연속돼 온 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완고한 질서가 섹슈얼리티와 젠더라는 사실을 반증. 재/생산할 수 없는 몸, 성별과 성적 쾌락의 위험성을 담지하는 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몸과 이를 보조하는 몸 등을 식별하고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은 이성애중심, 이원화 된 젠더 체계를 통해 작동해왔음.
- 모든 차별이 젠더화 돼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핵심 축에 놓인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 질서에 주목.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배의 구조에 젠더가 접합되고 또한 서로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여성’이라는 범주가 현행화 되고 있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언설들 역시 경합 중
- 누가 ‘진정한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 발화자의 위치. 계층, 학력, 장애, 섹슈얼리티 경험과 차이 비가시화

2. 페미니즘의 ‘변질’이라는 진단과 불안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 여성’ 우선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그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 해서라기보다는 젠더가 정치적,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바로 그 지배의 매트릭스와 교차하는 지점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이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페미니즘은 억압과 차별에 반대해야한다는 당위를 논거로 들기도 함. 젠더 본질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음)
- 지금, 여기 자신이 여성으로서 동일시하는 위치와 경험을 보편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경험 자체가 진리라는 반지성주의적 태도, ‘당사자주의’에 대한 이해를 노정 → 고통 경쟁과 권리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개별화 된 갈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 (물론 개인 수준에서는 여성됨의 이해가 곧장 구조적 이해로 이어질 수 없음. 그러한 기대와 ‘속도의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페미니즘은 다른 사회운동과 다를 바 없고 '여성' 의제는 부차화 될 것이라는 강고한 항변의 지속 속도

- 페미니즘은 '여성'을 놓은 적 없음. 다만 이때의 여성은 고정불변의 선형적 범주가 아니라 구체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구성되는 것. 누가 여성이고 무엇이 여성을 만들어내는가, 과연 인간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교차성 관점을 통해 탈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교해지는 것(발제자3. 남성중심적인 투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됐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님)
- 물론 그 우려처럼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인권 정치에서 불가분성(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어떤 권리에 순위와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음), 상호의존성(하나의 권리 실현은 다른 권리 실현에 의존)을 개념화 한 것은 유토피아적 상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분리된 각 권리(예. 낙태죄에서의 건강권, 생명권, 성적 자기결정권)가 서로의 실행 없이 온전히 담보되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권리가 상호 보장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라는 주문이자 논의의 틀거리
- 이러한 노력을 방기한 채 손쉽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발제자1의 예시처럼. 레즈비언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적 괴롭힘과 같은) 복합차별의 경험은 이성애중심적으로 "왜소화" 됨. → "대문자 여성(Woman)을 위한 정책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획득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도 '보편'이라는 언어를 전유"

3. "내 파이"에서의 파이란 어떤 형상인가?

-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려 온게 아니다". 개별화 된 주체가 감지하는 체화된 문제 의식과 변화의 가능성.
- 단, 위험 인식과 안전공간 구축 방식의 실익 → 정보의 확증 편향, 자기 검열, 자신의 이질적 욕망과 경험을 드러내지 못함. 스스로 소외(이를 완전히 통합시킬 수 있는 여성 주체란 과연 누구?). 여성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선택과 자기계발(나머지는 모두 희생). 독해 방식 및 시각 자료 재현의 획일성. 고립감과 분노.
- '파이'? 뺏고 뺏기는 파이? → 안전에 대한 내 욕구. 이주 여성의 숙소, 형제복지원, 성매매 집결지, 유흥업소, 감염, 요양원, 마더링, 가족... 문제의식의 접합과 논쟁 및 대안 제시의 활성화. 파이가 커지는 방법. (그래봤자 개인/집단의 이해 득실 계산으로 귀결될까?)
- 복합차별 결국 이 법을 해석, 집행할 여성들, 이들은 지금,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목전의 이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남기는 효과. 누군가는 죽음으로. (발제자3: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주체로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를 이용하여') **역사적** 존재성에 대한 이해 결여
- 규범적, 예방적 범주들을 강요하는 시도로서의 '연대' - 분자화된 개인들의 상호작용. 전체 환경에 대한 진단과 연동되지 않는 한계.
-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간의 유사성은 차이의 맥락 속에 존재하지만 연대가 그 차이 자체에 관한 것 혹은 공통성에 관한 것이 되는 것을 경계해 옴('횡단의 정치', '내부의 외부인outsider-within'). 타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 실존적 당사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위치의 부분성에 대한 이해는 페미니스트 입장론, 인식론의 출발. 내 현실+다른 위치. 연대는 다른 위치에서의 + 공통 지식에 기초한 것

4. 페미니즘만의 자기 성찰을 넘어: 주체, 경험, 담론

- TERF 등 최근 부상하는 배제의 움직임들을 두고 이들이 과연 어떠한 주체인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진단과 관심 증대. 폭력, 실업 등 왜그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삶의 조건, 권리를 관계적 실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개인간 분배와 소유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태도, 이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효과.
-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의 탄생 과정에 ‘나’는 어떻게 연루돼있는가? (발제자1이 논의의 필요성으로서 서두에 진단한 것과 같은) 평등과 차별에 대한 정책 개입이 가져온 유제는? 이때 중요한 것은 정책과 실행의 언설들. (정책과 법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진단 대신, 그것들을 매개로 생산된 언설들을 문제화 하는 것/ 최소한의 온정을 위해 ‘팔았던’ 차별의 고통과 존재의 규범화)
- 교육. 생물학적 성차를 개인이 관리, 책임져야할 특질로 환원하고 그 성차를 극단적으로 대립 + 성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와 노력을 통해 ‘동등’해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와 부모 교육 → 위험 회피, 책임, 편견 벗어나기 등 시민성을 구조에 대한 이해 확장이 아니라 개별화된 인간의 덕성과 실천 문제로 간주하는 교육 방식
- (발제자들 공히 지적하고 있는) 개인을 구성하는 다수의 정체성, 지배체계가 상호작용하며 삶의 조건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실, 불평등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은 어떻게 구현되고 받아들여져 왔는가? → 이것을 ‘나’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볼 해석의 기회와 경험의 부재. 디지털 공간을 통해 비로소 접하게 되는 타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추상화 된 존재(경험. 정도의 차이. 세대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미 저 역시)로서의 타인
- 관용을 요청하는 언설들(학업성취와 텍스트, 타인의 물화된 삶 교차성을 복합성이 아닌 가중된 차별로 이해-TERF의 동물학대 반대 + 차별, 배제, 주변화, 낙인 등 개념의 분석적 이해 필요성 불인지와 도덕적 태도) + 그것을 PC함으로 조롱 + ‘혐오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 보도 +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배제 전략과 ‘나중에’ 사태(‘차이’의 정치에 부응하지 못했던 남성중심적 국가폭력론) → 경험과 위치가 아니라 존재의 구속성(특히 귀속적 정체성 구성)에 호소해야하는 상황 강화(나와는 이질적 존재로 구획) → 존재가 위치, 행위 없이 ‘결정’되는 것인가? 내 위치,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성평등을 향한 차별금지법 제정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1. 교차성,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내가 이해한 이번 토론회 발제문의 주요 화두는 ‘교차성’이다. 모든 여성이 같은 차별을 경험하진 않는다는 사실은 교차성 개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교차성 개념은 복합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도 공명한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교차성을 언급하는 까닭은 다양한 차별을 발견하고, 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가 교차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차성에 기반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내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일인 동시에, 그 특정한 정체성으로 나를 수렴하고자 하는 힘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은 ‘여성은 이럴 것이다’, ‘성소수자는 이럴 것이다’, ‘장애인은 이럴 것이다’와 같은 관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가 여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 나는 여성 성소수자로서 싸우지만, 나를 여성 성소수자로만 요약하려는 어떤 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에 저항하는 언어,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갱신해나가는 일은 페미니즘의 과제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온 운동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이다. 앞서 발제문에서 언급된 ‘대체인력’ 여성, 이주 여성, 장애 여성은 제각기 새로운 쟁점을 던진다. ‘여성’의 경험이라고 상상되지 않았던 경험들,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차별들이 새로이 기입되는 것이다. 한편 이는 각각 ‘대체인력’, ‘이주민’, ‘장애인’의 경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경험과 차별들에 특정한 경험들을 새로이 더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차성에 기반한 페미니즘은 정체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차성 개념의 의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더해져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교차적 관점을 통해 정체성 범주를 끊임없이 갱신할 때, 교차성 개념은 비로소 효용을 가질 것이다. 억압의 범주 ‘들’은 결코 단일하게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범주들과의 교차와 상호작용 속에 침투해, 기존 범주는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는 연속적 과정에 놓여있다.²⁰⁾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차별에 대한

20) 황지성. (2019). 주체화의 침묵에서 부서짐의 언어로. 인문학연구, 58(0), 73-101.

시정을 넘어, 정체성에 대한 규범을 해체하고 기존의 정체성 범주를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힘이 될 것이다.

2. '성평등'의 의미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성평등'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획하는 성별이원체계의 세계를 뒤흔든 몹쓸 개념으로 꼽힌다.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존재들을 포괄하기 위해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세계에는 여성과 남성, 즉 양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다.

'양성평등이 아닌'이라는 구절이 따라붙을 때의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굳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평등의 대상은 성이 아니라 양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뒤섞는,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만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라는(심지어 페미니즘도 아니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인 것과 관련된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청소년에 대한 차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차별 모두 성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HIV 감염인의 성적 행위는 금기시되며 심지어 처벌이 존재하고, 청소년이나 나이 든 사람의 성적 행위 또한 부적절하며 때로는 금지되기도 한다.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 또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운동 또한 성평등을 향한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평등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평등의 대상으로서 포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성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성에 기반한 억압을 해체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 운동은 성적 권리의 충분한 보장을 향한 운동이기도 하다.

성적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괄한다. 1)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 건강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제공받으며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괄적이고 근거에 기초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개인의 몸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5) 누구와 성적 관계를 맺을지 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합의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7)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8) 자유의지 및 충분한 동의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이나 파경 후에도 형평성이 보장되는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 생활을 누리며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10)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숙지한 후 자유롭게 자발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성적 권리의 충분한 보장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적극적인 차별의 금지와 평등의 원칙 없이는 불가능하

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에서는 2020년,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제5조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2항은 다음과 같다.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차별금지의 뜻을 담은 제5조를 제1장 총칙에 포함한 것은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을 불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법적·사회적 차별은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중 하나이며,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평등의 중요한 가치로서 성과 재생산의 건강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10조는 성적 즐거움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10조는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성적 즐거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왔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어떤 여성의 임신중지는 금지되는 동시에, 어떤 여성에게는 불임시술이 강요되는 사회 속에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함께 이야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나가며, 성평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상상도 필요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향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발견된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평등을 향한 큰 전진이 될 것이다.

3. 차별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운동은 ‘페미니즘’이라는 명분을 걸고 차별을 자행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만 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성과 관련된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제각기 다른 모습의 차별의 경험들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에 대한 차별이 당신의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차별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왔다.

누군가 여성의 ‘안전’을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내보일 때, 이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많은 페미니스트 활동가, 연구자들이 실천해왔듯 무엇이 여성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인지를 명확히 짚을 수 있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고, 반차별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내세우며 나아가야만 한다. 지금 당장,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1/

함께 전진할,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이 놓인 자리

제헌헌법에서부터 평등은 선언되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 체제에서 평등은 입에 담기 위험한, 불온한 말이었다. 87년 체제는 평등을 되살렸을까?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될 때 ‘남녀평등기본법’도 발의되었다. ‘여성발전’이라는 용어에 문제제기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평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 89년 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남성우대 할당제가 폐지되자 군가산점의 문제가 차별로 인지되기 시작했고 평등은 전진했다. 그러나 군가산점 폐지는 역차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이라는 오랜 요구가 2015년 국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왜곡되고 만다. 평등은 이제 불온한 말은 아닐지 몰라도 비틀린 말이 되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2017년 체제로의 전환을 설파하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평등과 차별금지법 사회적 가치로서 충분히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김정혜) 공공연히 여성을 ‘미발전’된 존재로 만드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 양 ‘남녀평등복무제’가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체력 차이’로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논리²¹⁾는 경찰에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뒷받침하고, ‘체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체력시험 기준을 달리하는 것²²⁾에 논란이 불을 때는 뒷짐을 진다. 여성은 차이를 승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힌다.

21) 군가산점 폐지 이후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위헌심판은 세 차례 열렸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단 근거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2011헌마 825) 덧붙이자면,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를 우려하며, 성희롱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를 문제 삼는 판단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젠더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여군의 행위성과 전략이 어떻게 주조되는지는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다. 김엘리, 여성 군인의 능력 있는 자기계발과 군인 되기,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2018.3.

22)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은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을 달리 한다. 100미터 달리기 경우 남성은 13초 이내, 여성은 15.5초 이내에 들어오면 만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오래된 역차별 논란 중 하나인데, ‘대립동 여경’ 영상 이후 다시 논란이 일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나 특정 직업을 특정 능력과 연관시킨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청은 체력검사 방법이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비가시화하기로 작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항목을 지웠다. 차별금지도 ‘법 제정 추진’에서 ‘방안 검토’로 후퇴시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회구성원 중 특정한 집단을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 평등은 관용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 받아들이는 만큼 뭔가 쥐어주겠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등장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준비’는 불가능하다. 배제의 선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일 뿐이다.

평등은 비틀린 채 멈춰있고 배제의 선은 더욱 견고해졌다. 역차별 주장을 회피하려는 ‘양성평등’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양성평등’과 만났다. ‘여성’일 때에만 포섭되는데 포함되더라도 ‘남성’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이 놓인 자리다.

#2/

차별금지사유라는 쟁점

차별금지사유는 정체성을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발달장애아동의 비장애인 부모가 겪기도 하며,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내국인 여성이 겪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차별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며 ‘철폐’하는 과정을 사회적 경험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배경에서 비롯한 다양성에 대한 항목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로 표현되었는데 그 의미와 논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비하였다.”(이소훈)는 지적은 비단 이주배경과 관련된 차별금지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사건은 차별금지법을 특정한 정체성과 결부시키는 방식을 강화했다. 성소수자는 삭제된 존재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사회에 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은 성소수자를 광고에 노출시키거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드러내왔다. 정체성이 삭제된 것이 아니다. 세계의 질서에 맞서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누군가 삭제되고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이러한 권리 주장의 과정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특정한 정체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봉인되는 현실에 맞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노력이 이어졌다. 교차성이 중요한 열쇠말로 부각되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나 ‘복합차별’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지원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한국인 직원과 달리 호봉 기준이 없어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년마다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갱신을 요구받는다. 남녀고용평등법만으로 차별을 다루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질문을 던져볼 때는 아닐까? 비장애/내국인/고학력/이성애/시스젠더 여성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지.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성차별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상세 규정을 담은 법이 필요한 것이다. 성차별은 이제 없고 역차별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성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가. 차별을 말하는 익숙한 방식은 어떤 지표들의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성별임금격차나, 장애인빈곤율,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률 등. 이런 방식은 차별을 다시 정체성의 문제로 귀속시킨다. 그리고 정책의 재료가 된다.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될 뿐, 불평등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싸울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넘어서 나게 겪고 나면 프리랜서로 일할 방법을 알아보는 여성들이 있다. 웬만해서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 보니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착취 당한다. 일을 구하기 위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할 때 여성과 남성의 부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로 주장하며 싸울 수 있을까. 여자라고 무시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알보이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것 말고 다른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차별적인 면접 질문들에, 대처법 말고 퇴치법을 만들 수 있을까.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가로막히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그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는 잘 안다. 경찰은 일단 길을 막고 버티고 집회는 무산되기 일쑤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게 ‘집회 시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의 정보를 알리는 노력을 했다. 경찰은 꿈쩍 않지만, 우리가 당당하다. 우리가 옳다. 법이 늘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차별을 따질 수 있는 근거지가 있다면 달라지는 풍경이 비슷할 듯하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그렇듯, 차별에 맞서는 평등의 권리가 한 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로 싸움을 미룰 이유는 없다. 차별금지법의 공백이 모두에게 확연히 보일 정도로, 차별을 ‘발견’ 하고 ‘해석’ 하고 ‘대응’ 하며 ‘철폐’ 하는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녀평등’으로부터 페미니즘이 탈출할 방법도 그것이다.

#3/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2010년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나”라는 희대의 구호가 조선일보 신문광고에까지 등장했다. 피식 웃음이 나오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매우 진지한 주장이기도 하다. 차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종종 사람들에게 묻는다. 며느리가 남자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무슨 문제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자라면, 명절 때 며느리를 부엌으로 부를 수 있을까, 시부모가 아플 때 휴가 내고 병원 모셔가는 일을 며느리한테 맡길 수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당황한다. 차별을 없애는 과정은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차별받은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게 더욱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방될 것 같은 두려움”(배복주) 견고한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쏟아질 비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의 부담, 혼란을 감수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은 더욱 없는 조건 외모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지만 결국 포토샵 보정을 잘해주는 사진관 정보가 요긴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수월하다. 하지만 노키즈존이라고 써붙인 공간에 침입할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다. 우리에게 노키즈존 침입을 감행할 것인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갈 것인가의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고, 상업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세계가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은 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문제다²³⁾.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혼란을 세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장애여성으로서 비장애여성 활동가가 다수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위축과 고민”(배복주)은 차별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고민을 모두의 고민으로 만드는 관계를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일 것이다. 서진학교(서울 강서구에 건립된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과 그의 부모들이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사회가 대신 무릎 꿇어야 한다. 차별의 구조를 흔들지 못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으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게 만든 사회가, 무릎 꿇는 방식이 무엇일까. 차별행위의 인정일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가 차별의 심판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성별 갈등’으로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의 모습은 심판자를 자처한다. ‘여성은 성차별을 받지, 그런데 남성도 역차별을 느낄 만하지, 그러면 어떻게 중재할까 또는 어떻게 회피할까.’ ‘젠더갈등’이라니. 젠더 자체가 갈등의 개념이다. 그 갈등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성차별이다.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정체성을 통해서만 호명되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우리가 호명되는 정체성을 뚫고 나와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갈등을 정치공동체의 한가운데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갈등과 혼란을 세계로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무엇일까. 이 갈등과 혼란이 다시 ‘성별’ 갈등으로 환원되어 국가가 남성과 여성에게 떡고물이나 던져주고 그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손잡을 것인가.

우리가 모두 고유한 존재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세계에 혼란을 일으킬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이주여성 통번역사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의 “똑같이 일하고 왜 이주여성들만 적게 받아야 하나요” 토론회(2020.12.) 자료집을, 여성 플랫폼노동자 관련 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의 <제도공백: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토론회(2020.10.) 자료집을 참고했습니다.

23) 토론문을 먼저 읽어준 동료의 이야기를 보탠다. “201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여성운동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이 ‘평등’에 초점을 맞추느라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해오지 않았고 새로운 여성주체/운동의 등장은 이런 자유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다는 논의들이 있다. 일견 어떤 현실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평등 내 자유의 구도로는 이런 현실을 살피고 문제를 풀기 어렵다.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중요한 고민이다.”